

‘이재명 펀드’ 모금 전 ‘문재인 펀드’ 실패 분석을

광화문·부

김 신 영

경제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는 주력 상품은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민간이 함께 모은 돈을 혁신 분야에 투자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애초 5년간 100조원 규모였는데 15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련 행사가 열렸다.

국민성장펀드는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뉴딜펀드의 확장판으로 보인다. 구조가 흡사하다. 정부·금융사·연기금·기업 그리고 국민이 돈을 대서 AI·반도체·로봇 같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수익을 나누겠다고 설명한다. 5년 전 보도 자료를 보니 유사한 문구가 적잖다.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겠다고거나, 정부 자금은 ‘미중물 역할을’ 하고 펀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한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대부분을 떠안겠다는 내용(후순위 출자·보장)도 비슷하게 들어 있다.

뉴딜펀드도 5년 전 출시 때는 요란했다. 지난주 행사처럼, 관계 장관과 재계·금융계 대표를 모아놓고 대통령이 이 선포식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섯 개 펀드에 1000만원씩을 넣었다. 정권이 지원한다고 인기몰이를 해

인 투자자용 펀드는 출시 첫날 ‘완판’됐다. 정부는 첫째 목표한 4조원보다 많은 5조6000억원을 모았다고 자랑했다.

이 펀드의 목표 규모는 5년간 20조원, 기간은 올해까지였다. 하지만 결산 보고회 소식은 없다. 다른 주식형 펀드보다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초기 보도가 나오면서 인기는 진작에 식었다. 2022년 정권 교체 후엔 ‘뉴딜’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여기저기 생긴 부처 및 금융사 내 뉴딜 조직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간판을 내렸다.

뉴딜펀드에 관한 종합적인 실적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투자한

150조 모은다는 국민성장펀드 실패한 5년 전 뉴딜펀드와 비슷 수익률 부진, 투자처도 불투명 용두사미 관제 펀드 재탕 말아야

국민 입장에서 평가 가능한 지표는 개별 펀드 수익률뿐이다. 문 전 대통령이 산 대표 펀드 다섯 개의 2021년 초 이후 수익률을 뽑아 보니 두 개는 30~40%대 손실을 기록 중이고 다른 둘은 수익률이 코스피는커녕 예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다섯 중 하나만 코스피보다 올랐다. ‘국민의 부를 불러주겠다’는 선언이 무색하다. 이 대통령은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냈듯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도 국민이 함께해 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펀드가 아닌 기부라 하는 편이 정확하

지 않을까.

불투명성은 뉴딜펀드의 또 다른 약점이었다. 출시 한 해 뒤즘 펀드를 판 자산운용사에 투자한 기업이 어딘지 취재한 기억이 난다. 담당자는 “돈 모아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간접 형식이라 최종 투자처는 모른다”고 했다. 지적이 일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운용 보고서에 구체적 투자처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공식 자료에서 최종 투자처는 여전히 찾을 길이 없다. 투명성이라도 갖췄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행사 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호명해 마지막 발언을 맡겼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40%면 지난해 전체 지방교부세와 맞먹는 60조원이다. 뉴딜펀드도 35%는 지방에 썼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증권사 CLSA는 당시 ‘문 대통령, 펀드매니저로 데뷔’란 제목의 뉴딜펀드 분석 보고서를 내고 “펀드로 표를 얻고자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펀드가 지방 ‘표심’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되려나 싶다.

뉴딜펀드와 다른 국민성장펀드의 특징은 150조원이라는 큰 몸집이다. 지난해 전체 벤처 투자자금이 12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만 시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집권당이 만들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관제 펀드를 키워 다시 내놓으려면, 면밀한 실패 분석은 해야 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9]

맨해튼에도 밀밭이 있었다

1982년 여름, 미국 맨해튼 남부에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밀밭이 나타났다. 월스트리트를 등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하고 있는 땅이다. 원래 이곳은 1973년 완공한 세계무역센터를 세우며 파낸 흙과 폐자재로 허드슨강 하구를 매워 조성한 매립지였다. 헝가리 출신 예술가 애그니스 디니스(Agnes Denes·1931~)는 1982년 봄 이 황량한 땅에 밀을 심었다.

축구장 하나 반 넓이에 트럭으로 흙을 부었다. 그다음으로 쓰레기와 돌을 깔아내고 이랑을 수백 줄 만들어 씨앗을 뿌린 것은 온전히 사람 손이었다. 디니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석 달 동안 잡초를 뽑고 물을 대 밭을 돌봤다. 마

침내 8월 16일 밀 455kg을 수확했다. 같은 면적의 농지에서 기대할 양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하지만 매립지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기적 같은 수확이었다. 밀짚은 뉴욕 경찰 기마대의 말 사료가 됐다. 수확한 밀은 마네스타 미술관이 주관한 ‘세계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 미술전’에 출품됐다. 전시는 세계 도시 28곳을 순회했고, 밀은 도시 곳곳에 조금씩 심었다.

밀밭은 그 여름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맨해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한 그곳은 지금 고급 주거·상업 지구가 됐다. 작가는 작품명에 ‘대결’을 붙였지만, 값어치가 천문학적인 부동산 위에서 고작 밀을 키우



애그니스 디니스, 밀밭-대결, 1982년, 면적 약 8000㎡, 뉴욕 맨해튼.

는 건 처음부터 되지 않을 도전이었다. 지금 사진을 다시 보면 미국 속에서 무너져 내린 세계무역센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풍성했던 밀밭에서 퍼져나간 씨앗은 여전히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른다. 생명을 품은 밀알은 눈앞에서 사라졌더라도 어쨌든 다른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대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내란법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 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 구성을 친민주당 우위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법조계는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사법부를 행정부 부처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

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대법관 증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권력에 의한 일방적 사법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이렇게 입법·사법부가 충돌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회 우위를 말했다.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아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규제 완화’ 허망하게 들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규제 합리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내세우는 단골 메뉴였지만 제대로 된 적은 없었다. 특히 이번엔 노란봉투법과 같은 심각한 규제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 정부가 ‘규제 개혁’을 언급해 실요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정외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의 규제다. 이날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게 한 ‘노동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규제라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최대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불어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성장하면 보상이 아니라 벌칙을 주는 규

제 왕국이란 얘기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려 하겠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과 ‘트럼프 관세’만 해도 버거운 우리 기업들이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 올해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역전당한 가장 큰 이유도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이미 2023년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타다’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왜 규제가 양산되고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지를 잘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표단 의식에 숫자가 많은 쪽 편을 들면서 규제를 만들고 지키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바뀔 기미가 전혀 없는 데 정부가 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을 외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인은 정부의 규제 개혁 회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면서 무슨 규제 개혁이냐는 항변일 것이다.

교육감들 대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경기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든 고3 학생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을 따는 데 쓰라고 준다는 데 한 해 예산이 372억원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서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414억원, 내년엔 600억원으로 치솟는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들이 수백억 원씩 현금 살포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5991억원으로 4년 전의 2배로 늘었다. 5년간 전국 교육청이 지급한 현금을 합하면 2조원이 넘는다.

특히 올해 고3 학생들은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고3만을 지목해 현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형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뿌리는 분야가 정치권도 아니고 교육계라니 놀랄을 뿐이다.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교육감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받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 예산이 올해 72조3000억원에 이른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니 돈 쓸 곳을 못 찾는 지경이다. 그러니 죄의식 없이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이다. 반면 대학들은 16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을 대학과 나눠 쓰면 모두에게 좋은 텐데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손대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를 개선하면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장차 통일한국이 핵보유국? 꿈 깨라!... 그건 통일한국 아니라 김씨조선(후기조선)!

핵 없는 한국이 핵 있는 김가왕국 이긴다고? | 어림없는 소리, 핵무기는 교섭력 | 약한 한국은 을, 강한 평양 것들은 갑



▲ 1959년 10월 1일 천안문 망루에 선 김일성. 김일성은 마오쩌둥 오른쪽 4번째 자리. 왼쪽부터 김일성, 주은래 중국 국무원 총리, 미하일 수슬로프 소련 외무위원장, 호찌민 베트남 국가 주석, 모택동,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 서기. © 신량망

《중러북 블록 vs 미일EU 블록》

중러북 블록, 탄탄할까?

시진핑-푸틴-김정은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구 소련 시대까지 포함하면, 1959년 모택동-후루시코프-김일성이 함께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메가-지역주의》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다.

《메가-지역주의》는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이다.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끼리 《블록(block)》을 형성. 안보와 경제 면에서 동시에 이득을 구한다.

중러북은 하나의 《블록》을 지향할 테지만, 한계가 많다. 사회주의엔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없다. 모든 걸 정부가

통제한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정부 통제는 더 큰 비효율로 이어진다.

미국 주도 블록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의 역할을 같이하겠지만, **중러북 블록**은 경제동맹의 역할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이라 불려지지만, 진정한 의미의 《메가-지역주의》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속셈은 오로지 반미?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러북 정상이 같이 망루에 오른 건 대미 교섭력 강화를 위한 레버리지가 필요해서다. 중국은 미국의 대척점에서 《반미 블록》을 형성. 관세전쟁 선봉에 서려고 한다. 이번 열병식은 신 보호주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향해 리더십 각인의 효과를 냈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돈바스 지역을 넘겨받고 소모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이다. 북은 경제체제를 벗어 나고 싶어 할 것이다. **중러북** 이해관계의 교집합에 《대미 교섭》이 있다.

《중러북 블록》과 《미일EU 블록》, 두 블록 사이를 정제감 없이 오가는 건 한국이다. 반면 정제감을 유지하며 교섭력 《갑》으로 올라선 건 북이다. 북의 《혼합 전략》이다. 중국과 《조중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러우 전쟁에 참전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시그널을 날려 판에 끌어들여야 하고 있다. 동족 남한은 외교상대로 인정치 않고 《개꿈》 깨라고 조롱

한다.

김정은의 대미 교섭 압박 신호탄?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대미 교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2019년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시진핑을 만났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 전, 교섭력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연대감을 민방에 과시한 이유다. 시진핑 역시 북과의 연대감을 대미 교섭력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주목할 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핵은 교섭력 강화를 위한 북한의 《조커》다.

2018년 3. 5. 6월과 2019년 1월 등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선 모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입장이 있었다. 이번엔 아니었다. 《북한 핵보유》에 대해 중국 측 입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씨조선, 탄생하는가? '민국' 아니라 '왕국'?

짚을 게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한국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은 물 건너간다. 북의 교섭력이 남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북이 한반도 관련 모든 국제 교섭을 주도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의 이해가 자연스레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황당한 소리가 있다. 평양이 핵을 보유한 채 남·북한 통일이 이뤄지면, 장차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허구적이다. 그런 주장은 《순차적 개입》을 전제로 한다. 《통일한국》이 되는 단계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교섭력이 약한 《을》은 교섭력이 강한 《갑》을 상대로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 남이 《핵보유국 북》을 상대로 그 체제를 포기하도록 하기 어렵다. 즉, 남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한국》 단계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통일한국》 단계가 도래한다면, 그건 교섭력 《갑》의 나라가 원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통일한국》이 아니라, 《통일조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주의-통제경제의 나라》, 《공화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불건 전체 왕국》이다. 《이씨조선》이 《김씨조선(후기조선)》으로 탄생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꼬락서니다.

이 양 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9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75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